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제37회 개발협력포럼, 인권기반접근과 국제개발
2017. 12. 13.

인권기반접근법에 따른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수행 체계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성훈, 정지선, 신재은, 홍문숙
김선영, 김은영, 정원선, 장아영

I	서론				
II	주요 양자 원조기관의 인권기반접근 추진현황				
	<table border="1"> <tr> <td>1. 영국</td> <td>2. 미국</td> </tr> <tr> <td>3. 스웨덴</td> <td>4. 독일</td> </tr> </table>	1. 영국	2. 미국	3. 스웨덴	4. 독일
1. 영국	2. 미국				
3. 스웨덴	4. 독일				
III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의 국내적 논의 및 지원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 2. 인도적 지원의 취약계층 지원 3. 외교부 및 KOICA 민관협력사업의 취약계층 지원 4. 국제개발 시민사회의 취약계층 지원 5. 소결 				
IV	KOICA의 인권기반 포용적 접근 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KOICA의 인권 주류화 현황 2. 취약계층에 대한 이슈별 접근 3.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 체계 제안 				
V	결론				

I 서론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UN SDGs는 보편성이 개발목표의 핵심요소
- 불평등 문제, 취약계층고려에 대한 개발 의제화 ‘Leaving No One Behind’
- 인권기반접근법(RBA)을 활용하여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에 일반적 국별, 섹터별 국제개발협력의 한계
-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인권기반접근에 대한 전략 및 원칙을 수립할 필요성

연구목적과 전략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전략에서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인권기반접근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의 현황 파악
- 선진공여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 등의 인권기반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에 대해 분석
- 인권기반접근의 단기 전략으로서 취약계층 대상화 (targeting) 전략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사업에 대한 인권기반접근의 주류화 (mainstreaming) 전략 수립에 기여

연구 질문

- 연구 대상 국가/기관의 주요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무엇이며, 주요 전략에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 4개 원조기관의 사업 수행체계에서 인권기반 접근법과 취약계층 지원전략은 어떠한 단계에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 국제 논의 동향 및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취약계층 포용적 접근 원칙 및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개발협력, 특히 KOICA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I 서론

II 주요 양자 원조기관의 인권기반접근 추진현황

1. 영국
2. 미국
3. 스웨덴
4. 독일

III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의 국내적 논의 및 지원전략

IV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전략

V 결론

II 주요 양자기관의 인권기반접근 추진현황



1. 영국 (DFID)

1) 취약계층과 인권기반접근의 도입 배경

- 1990년대 후반부터 빈곤퇴치와 개발에서의 인권의 중요성 천명
 - White Paper(1997), Target Strategy Paper(2000) 출간
 - DFID 에서 '인권기반접근' 공식 채택
- '빈곤층의 인권실현(Realising Human Rights for Poor People) 전략

2) 인권의 주요원칙

- DFID의 기본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하기의 원칙을 우선으로 반영
 - 참여(Participation)
 - 포용(Inclusion)
 - 의무의 실현(Fulfilling obligation)

3) 협력 형태

- 전략적인 접근 (Strategic approach)
- 포용적인 접근 (Integrative approach)

II

주요 양자기관의 인권기반접근 추진현황



USAID
FROM THE AMERICAN PEOPLE

2. 미국 (USAID)

1) 취약계층과 인권기반접근의 도입 배경

- 2007년 QDDR(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4개년 외교개발 검토보고서)에 인권 포함
- 2013년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거버넌스 전략(Democracy, Human Rights and Governance, DRG) 수립

2) 인권의 주요원칙

- DRG를 USAID 프로그램 및 타 기술 분야에 통합적으로 적용
- DRG의 원칙은 참여(participation), 포용(inclusion),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네 가지로 구성

3) 협력 형태

-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와의 협력을 도모
 - 2011년 부산의 개발효과성 포럼에서 출현한 'Doing Development Differently'의 국제 이니셔티브와 통합하여 개발원조의 민감성과 효과성을 증진하는데 목적
- 개발 국가의 자주성 확립, 책무성의 증진, 지속가능하고 개발효과가 있는 개발조치에 목적

II

주요 양자기관의 인권기반접근 추진현황



3. 스웨덴 (Sida)

1) 취약계층과 인권기반접근의 도입 배경

- 외교정책의 기본관점이며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을 표방
 - '공동의 책임: 스웨덴의 글로벌 개발을 위한 정책' (Shared Responsibility: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의회 채택(2003)
 - 2014년 원조정책프레임워크 (Aid Policy Framework) 채택

2) 인권의 주요원칙

- 2009년 UN 인권 주류화 매커니즘과 인권의 주요원칙을 함께함

3) 협력 형태

- 협력의 다변화
 - 프로그램 차원의 협력
 -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 협의

II

주요 양자기관의 인권기반접근 추진현황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4. 독일 (BMZ)

1) 취약계층과 인권기반접근의 도입 배경

- 인권전략은 개발정책에 대한 경제적 지침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
 - 인권에 대한 개발정책 실행 3개년 계획(Development Policy Action Plan) 수행
 - 독일연방개발협력개발부(BMZ)는 '독일 개방정책에서의 인권전략'을 채택
-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의 인권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2) 인권의 주요원칙

- UN 인권조약이 지정한 9대 조약에 준거
 - 대부분의 국제인권협약 비준, 협약의 이행을 국가 차원에서 법적인 구속력 있는 의무로 수용

3) 협력 형태

- 직접적인 인권증진
- 인권기반접근의 주류화

II 주요 양자기관의 인권기반접근 추진현황

구분	영국 DFID	미국 USAID	스웨덴 Sida	독일 BMZ
정책/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년대 후반 백서, 2000년 전략문서에서 개발에서의 인권 중요성 강조: 불평등/소외를 빈곤퇴치의 주요장애요인으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7년 QDDR (중기외교개발 보고서)에 인권포함 2013년 민주주의/인권/거버넌스(DRG) 전략 수립: 인권개념을 미국이 강조하는 민주주의/거버넌스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3년 개발전략문서에서 인권기반 개발협력 강조: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인권관점을 개발 전분야의 기본 정신으로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BMZ '독일개발정책에서의 인권전략 채택 인권규범 준수 의무강조 개발협력 시행기관 대상 인권전략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포용 (정부/의무부담자의 책무성 이행) 의무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차별과 평등 참여와 포용 책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인권규범 연계 비차별과 평등 참여와 포용 책무성과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와 역량강화, 비차별과 평등, 투명성과 책무성 [인권기준]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협력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진단/상황분석 기반 CPS 수립 지역사회 참여, NGO 인지제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선주민, 장애인, LGBT,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 타겟팅 접근 사업 전분야에서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 연계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기반 접근 주류화: 특히 의무부담자의 역량강화, 정부/이해관계자와 대화 강조 직접적 인권증진, 취약계층 타겟팅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기반접근 주류화 직접적 인권증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주류화 보다는 소극적 접근 (참여, 인지제고 강조): 정치적 민감성 고려, 파트너국 정부 측의 의무를 특히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개념을 미국이 강조하는 민주주의/거버넌스와 연계 취약계층 타겟팅 시에도 인권기반 접근보다는 기술적 접근: 인권고려가 최우선 가치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주류화의 가장 앞선 모델 취약계층 타겟팅 접근에서는 최취약층 파악을 위한 면밀한 profiling 실시 일반사업 시 최소한 'Do no harm' 접근 필요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주류화, 직접적 인권증진 사업 외에 일반사업 시 최소한 'Do no harm' 접근의 필요성 강조

II 주요 양자기관의 인권기반접근 추진현황

현장조사를 통한 공여국의 취약계층 전략 적용

스웨덴 (Sida)

독일 (giz)

다양한 지침, 틀과 함께 개인, 조직차원의 인권기반접근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자문데스크 등 제도적 기반도 동시에 마련

- 주요분야/주제별로도 인권기본원칙 적용가능한 지침 제공
- 국가별/사업별로 제반 상황 차이 인지
- 각 지침에서는 사업 계획 및 이행과정, 모니터링 등의 단계에서 인권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key question** 제시
- (예) 보건 분야
 - **참여**: 환자에게 치료법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고 의사표명의 기회가 있는가?
 - **비차별**: 최취약계층/극빈층 및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인력이 편성되었는가?
 - **투명성**: 일반대중/보건관계자는 보건정책/서비스/예산에 대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가능한가?
 - **책임성**: 보건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불만개진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었는가?

- 독일 BMZ는 ODA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Do no harm' 지침 제시
- i)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권기준; ii)인권원칙
- GIZ, KfW 등이 사업형성단계에 실시하는 **예비조사에 인권기준/원칙을 적용하도록 의무화**
- 인권 위험요소 및 파급효과 파악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독일 ODA **중점분야별로 인권기준 적용에 대한 세부지침 제시**
- 인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리스트 방식**으로 제시, 선택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의도하지 않은 인권 위험요소: 특정그룹 차별, 참여권의 침해, 비자발적 이주, 노동권 침해 등
→ 분야별로 각각의 문제 해결방안 제시 (p.32)

I 서론

II 주요 양자 원조기관의 인권기반접근 추진현황

III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의 국내적 논의 및 지원전략

1.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
2. 인도적 지원의 취약계층 지원
3. 외교부 및 KOICA 민관협력사업의 취약계층 지원
4. 국제개발 시민사회의 취약계층 지원
5. 소결

IV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전략

V 결론

III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의 국내적 논의 및 지원전략

1.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 논의

- (법적 차원)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정책적 차원)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2011-2015)」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 (실행 차원)
 - 현재까지 성평등 관련 평가항목 외에 취약집단에 대한 분리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하지 않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개입의 실제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2. 인도적지원의 취약계층 지원

- (법적 차원)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정책적 차원)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 「인도적 지원 전략 (2015)」
- (실행 차원)
 - KOICA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자금지원 사업에서는 **여성, 환경, 취약그룹을 고려한 사업계획 권고**

3. 외교부 및 KOICA 민관협력사업의 취약계층 지원

- 2017년 외교부 민관협력사업 주제별 프로그램에는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강화가 다분야로 포함
- 민관협력사업의 취약계층은 여성, 장애인, 노인, 소수민족 등으로 규정
- 2017년 외교부 총 민관협력 사업(사업수 122개, 사업규모 27,354백만원) 대비 총 취약 계층 대상 사업의 비중은 **총 사업 수의 41%, 총 사업규모의 37%**

4. 국제개발 시민사회의 취약계층 지원

- 현장 활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한국 개발CSOs는 **110개 국가에서 2,177개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4천 9백억원임. 이 중 **최빈국 지원은 1천 9백억원으로 전체 해외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함.
 - 개발 CSOs도 취약계층 분리 통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원되었는지 추적하기는 어려움.

III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의 국내적 논의 및 지원전략

5. 소결

- ▶ 법적, 정책적 문서의 취약계층과 사업형태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가 달라짐.

문서 출처	취약계층의 범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제1,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여성, 아동, 장애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아동,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KOICA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 인도적 지원	아동·여성·난민 등
KOICA 민관협력사업	여성, 장애인, 노인, 소수민족
정부 취약국 지원전략(2017)	여성, 아동 등

- ▶ 취약계층에 대한 분리통계를 생산하지 않아 국제개발협력의 지원규모 파악이 어려움.
- ▶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CPS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필요와 지원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 ▶ 분쟁 취약국과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의 취약계층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 논의는 포괄하지 않음.
- ▶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에 대한 법, 정책 차원의 원칙과 규정은 존재하나 실행 상의 세부 지침과 방향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I 서론

II 주요 양자 원조기관의 인권기반접근 추진현황

III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의 국내적 논의 및 지원전략

IV KOICA의 인권기반 포용적 접근 전략

1. KOICA의 인권 주류화 현황
2. 취약계층에 대한 이슈별 접근
3.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 체계 제안

V 결론

IV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전략 1. KOICA의 인권 주류화 현황

KOICA 인권 주류화 법제 체계 프레임워크



- **국제적**
 - 2015년에 합의한 SDGs의 경우 인권을 보다 명확히 포함
- **국내적**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서 차기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15년 이후) 수립 시 인권 관련 가치 지향 목표 포함 권고
- **기관차원**
 - KOICA는 정책 및 사업수행 전반에 인권이슈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최소한의 원칙인 ‘해를 끼치지 않기(‘Do no harm’)’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KOICA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인권주류화 내재화 과제와 책무**
- KOICA의 인권주류화 도입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컨센서스

IV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전략 1. KOICA의 인권 주류화 현황

의의

- 인권증진에 대한 KOICA의 노력은 개발 이슈를 자선, 욕구의 문제를 넘어 '인권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는 측면,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제사회 논의와 함께함**

한계

- '인권전략(2013-2015)'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선언적인 측면에서만 머무른 점**
- **후속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점**
- 인권증진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보완노력

- **정책문서의 보완이 시급**
 - KOICA 선진화계획(2011-2015) 이후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에 인권 언급 없음
- 정책과 사업에 인권기반접근을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 부재**
- 조직적 차원에서 인권증진 노력을 지원할 **전담 전문관 부재**
- 사업적 측면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절차별 고려사항에 대한 정보를 보다 세부적으로 제공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성주류화 과정의 경험과 교훈에 기반하여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
 - 사업 시행절차별 과정에 인권의 기본원칙(참여, 비차별, 책무성, 임파워먼트)을 고려하여 반영, 실행, 평가 할 수 있는 제도 수립 필요
 - KOICA 조직 및 사업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 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

IV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전략

2. 취약계층에 대한 이슈별(인권, 젠더, 장애) 접근

가. KOICA 인권 증진 (배경 | 소결)

1) 배경: 국제 사회에서 개발협력사업과 인권이 본격적으로 연계

가. 정책적 차원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국제 개발협력 기본정신 중 하나인 **인권향상**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정책 및 전략,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인권적 관점**을 통합하고자 함
- 「KOICA 선진화계획(2011-2015)」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4대 범분야 이슈 중 하나로 인권 분야를 선정**
- 전략은 실제 사업 차원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단지 선언적인 의미만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제도적 차원

- ‘해를 끼치지 않기’(‘Do No Harm’)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7년 9월 신규 입찰 공고분부터 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인권 경영 실천**을 추진
- KOICA가 2017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성평등취약계층 전문위원회: 젠더 이외의 타 취약 이슈 전문가 수가 현저히 적어 **젠더전문가 중심**

다. 조직적 차원

- 현재 취약계층과 관련된 부서는 사회개발실로, 인권 업무는 젠더 전문관이 업무를 겸직하는 상황이라 인권 증진을 지원하는 **조직적 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인권 분야에 대한 교육은 일반인 대상의 개론 중심의 교육만이 마련되어 있음. 이 정도의 지식으로는 인권기반접근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라. 사업추진 현황

- KOICA의 인권증진 사업은 **인권마커사업으로만 분류**
- OECD 보고용인 젠더마커와 달리, **인권마커는 KOICA가 자체적으로 선정**
- 2015년 기준 인권마커사업의 수는 총 22건으로 인권 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사업으로 14건, 간접 목적의 주류화 사업 8건이 조사됨.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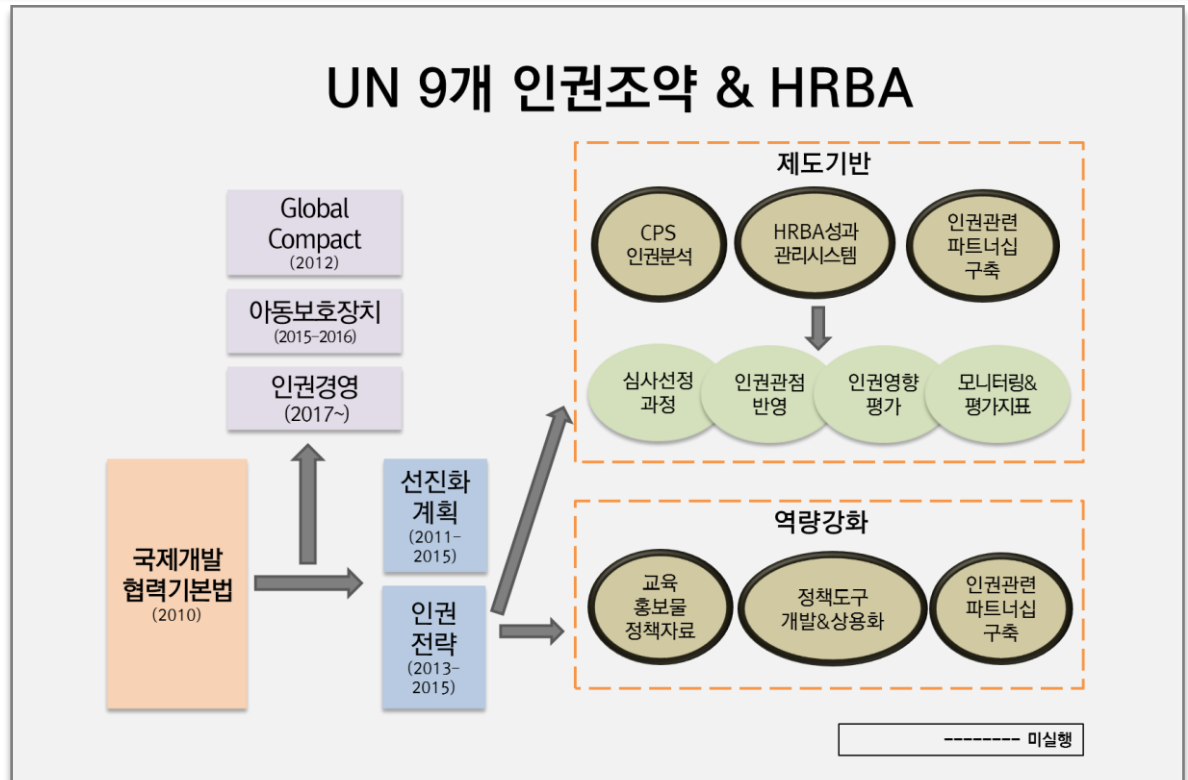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전략

2. 취약계층에 대한 이슈별(인권, 젠더, 장애) 접근

가. KOICA 인권 증진 (배경 | 소결)

2) 소결: 정책적·제도적·조직적·사업적 모든 측면에서 준비와 노력이 필요

- KOICA 인권증진 노력은 개발의 이슈를 자선이나 욕구의 문제를 넘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맞추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제사회 논의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인권전략(2013-2015)」이 이행되지 않고, 선언적인 측면에서만 머무른 점과 후속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점, 인권증진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에서 볼 때 상당한 수준의 조직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
- KOICA 인권주류화 및 인권증진을 위해 KOICA 성 주류화 과정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IV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전략

2. 취약계층에 대한 이슈별(인권, 젠더, 장애) 접근

나. KOICA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활동 (배경 | 현황 | 소결)

1) 배경: 성주류화는 OECD DAC과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핵심이슈로 부상

가. 정책적 차원

- KOICA는 대외원조에 있어 **성평등을 위한 기반조성과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
- 협력국의 성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강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별도의 「**성평등 목표전략(2011-2015)**」을 수립하였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KOICA 성평등 중기전략(2016-2020)**」의 경우 SDGs 목표와 연계한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성인지 통계를 도입 운영** 중

나. 제도적 차원

- KOICA는 기관 내 성 주류화가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입안 및 사업 수행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2010년 「**성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KOICA 내에서 성 주류화가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
- **젠더마커를 적용**한 KOICA사업의 성인지성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다. 조직적 차원

- KOICA는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기 위해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할 팀과 직제를 신설, 운영**하고, **성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 **관계자 역량강화**를 통해 성 주류화 추진 성과를 높이고자 함.
- 2010년 「성인지 담당관 운영에 관한 기준」 제정. 동 기준에서 제시하는 **성인지 담당관의 업무**는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및 성인지적 사업집행을 위한 정책 수립, 자문, 모니터링을 담당

라. 실행 차원

- KOICA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시 성인지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단위 사업의 성주류화 이행에 힘쓰고 있음.
- **2014년 젠더 툴킷**: 사업 단계에 따른 성주류화 체크리스트 등 실무 적용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확산
- 2014년부터 <UN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 계획(NAP)> 이행점검에 참여하여 여성대상 폭력의 예방, 평화와 안보를 위한 여성의 지위 제고에 기여

IV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전략

2. 취약계층에 대한 이슈별(인권, 젠더, 장애) 접근

나. KOICA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활동 (배경 | 현황 | 소결)

2) 성 주류화 사업 추진 현황: 젠더마커사업, 성주류화시범사업, 성인지예산사업으로 분류

- **분류의 한계:** 사업간에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각 분류에 해당 사업수가 많아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높고, 보다 면밀한 분석이 어려움.
- **성인지 예산사업과 성주류화시범사업이 일치하지 않아** 젠더 전문관이 관리해야 하는 성 주류화 관련사업(성주류화 시범사업+성인지예산사업)은 35개에 달함
- 젠더마커사업은 OECD DAC의 성평등 정책 마커 기준에 따라 분류함 (2017년 기준 약 40여개)
- **성주류화시범사업은 사업개발실 젠더 전문관이 선정하여 지역실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됨.** 본 사업은 젠더 전문관이 연2회 모니터링을 진행함. 2017년 3월 현재 23건의 성평등 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성인지예산사업의 경우 KOICA 예산기획실이 사업을 선정, 성인지예산에 대한 목표치나 할당액이 배정되어 있지 않음.
- 2017년 현재 WFK봉사단 사업과 연수사업 각 1개와 10개의 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이 동 사업으로 지정됨.

KOICA 성 주류화 사업 분류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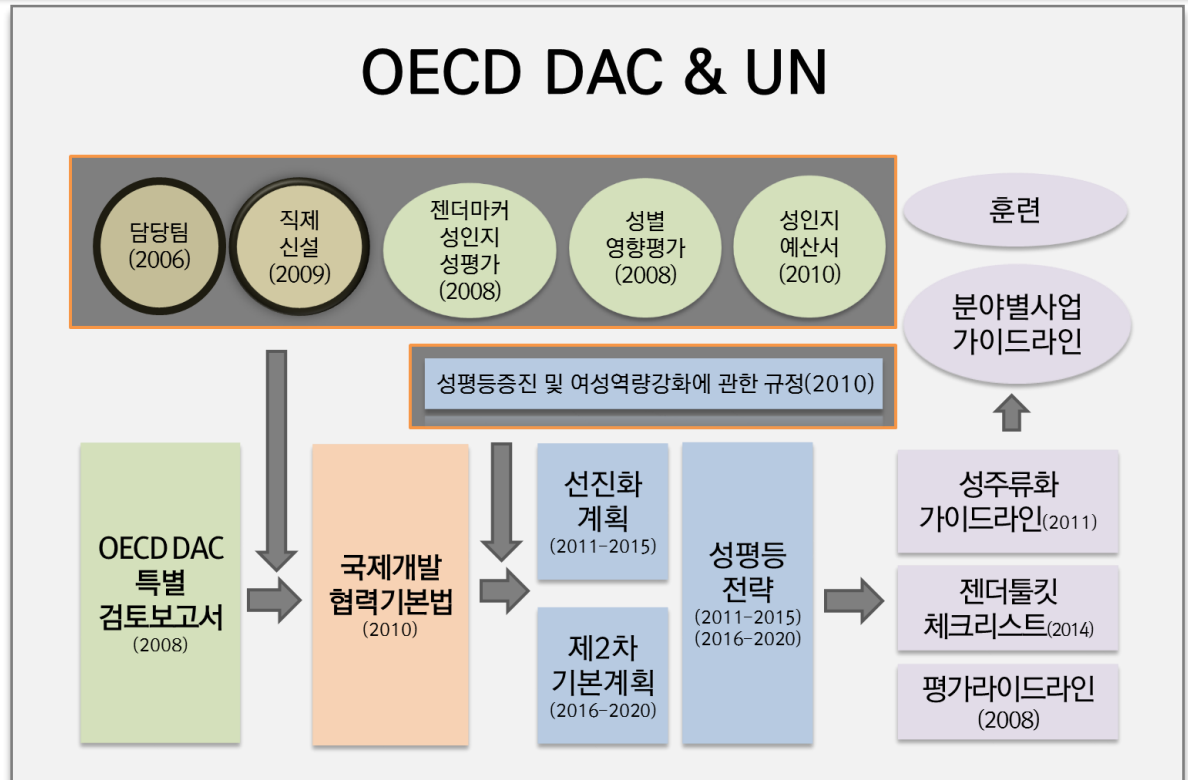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전략

2. 취약계층에 대한 이슈별(인권, 젠더, 장애) 접근

나. KOICA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활동 (배경 | 현황 | 소결)

3) 소결: 젠더 관점의 단계별 접근과 관심 필요

- 지난 10년간 KOICA는 성 주류화 이슈를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그럼에도 KOICA의 성평등 정책과 실제 이행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
- **성 주류화의 강화를 위한 제언**
 1. 젠더 관점의 단계별 접근과 관심
 2. 성평등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재구
 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성평가 등 다양한 평가 결과 및 교훈을 새로운 사업에 반영: 환류에 대한 제도적 개선
 4. 5개년 성평등전략의 이행 점검 체제도 별도 구축 필요
 5. 개발협력의 참여자 모두는 성 주류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각 참여자의 주요 역할 및 업무 내용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제공



IV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전략

2. 취약계층에 대한 이슈별(인권, 젠더, 장애) 접근

다. KOICA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배경 | 현황 | 소결)

1) 배경: 국제사회 장애관련 활동 중 한국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것은 크게 3가지

가. 정책적 차원

- 2013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를 개정하여 장애인을 취약계층에 포함하면서 개발협력사업에 장애포괄적 접근이 시작, 이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개발의 모든 과정에 장애관점을 포함시키고자 함
- 장애포괄적 개발은 장애특정적 사업과 장애주류적 접근의 '이중트랙 접근법'을 통해서 이루어짐.

나. 제도적 차원

- 장애포괄적 접근은 비교적 최근에 제기되면서 제도적 차원의 접근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음.
- 다만 KOICA가 2017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성평등취약계층 전문위원회**를 통해 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시도될 수 있으리라 봄.

다. 조직적 차원

- 현재 장애 관련 업무는 거버넌스 전문관이 업무를 겸직하는 상황이라 장애 포괄적 접근을 지원하는 조직적 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장애 분야에 대한 KOICA 임직원 및 일반인 대상의 교육이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장애 분야 담당자 및 사업수행자들의 역량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라. 실행 차원

- KOICA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가이드라인(2017)」에서는 KOICA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
- 동 가이드라인(2017)에서는 사업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모든 과정에 장애 관점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이 개발 과정 및 정책에 의미있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KOICA 5대 중점분야인 교육, 보건의료, 농림수산, 공공행정, 산업에너지에 맞춰 사업 분야별 예시 제시

IV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전략

2. 취약계층에 대한 이슈별(인권, 젠더, 장애) 접근

다. KOICA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배경 | 현황 | 소결)

2) 장애 사업 추진 현황 : 장애포괄적 사업을 위한 분류방식은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음

- 장애마커에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장애 사업의 수가 적어 마커방식의 분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논의됨.
-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의 경우 2017년에 수립되어, 과거 사업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힘들. 이에 사업추진 현황 및 지원실적만 파악
- 장애 포괄적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수행을 맡을 사업시행자 육성 정책도 함께 필요
- 장애분야 단체들의 역량은 기관의 규모나 국제개발협력의 경험 면에서 개발협력 민간단체와 차이가 많이 남. 지속적인 장애 포괄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역량있는 파트너를 육성, 확보하는 것이 관건
-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취약계층별 시범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에 파트너 육성을 포함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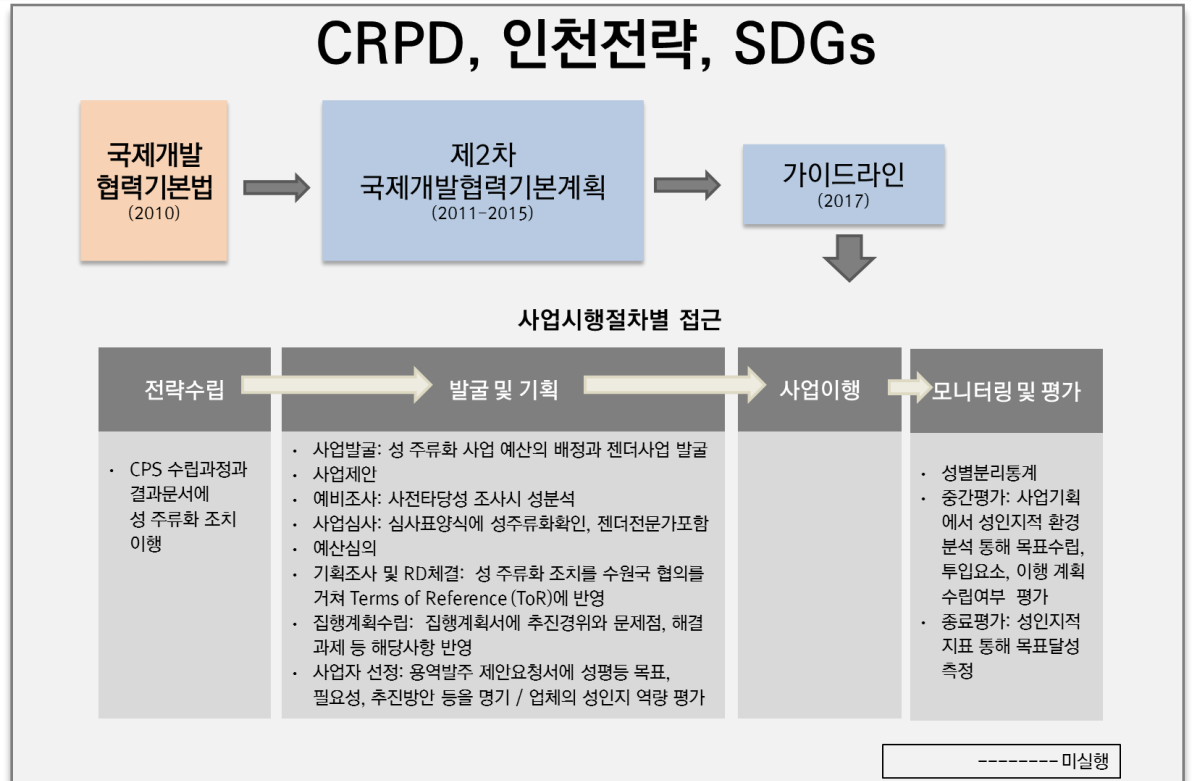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전략

2. 취약계층에 대한 이슈별(인권, 젠더, 장애) 접근

다. KOICA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배경 | 현황 | 소결)

3) 소결: 정책문서와의 연계점 강화, 장애 포괄적 접근에 대한 전략문서 마련이 우선

- 국제사회의 SDGs 대원칙(‘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실현을 위해 함께 동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한국에서 개발협력과 장애 이슈의 논의는 성평등, 인권 이슈보다 모든 측면에서 짧아 **기반구축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기존 성 주류화 및 인권 관련 제도와의 연계점을 찾아 통합 시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적용할 필요
- KOICA 및 사업관계자들의 인지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사업 수행을 누가 맡을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필요
- KOICA 임직원 및 사업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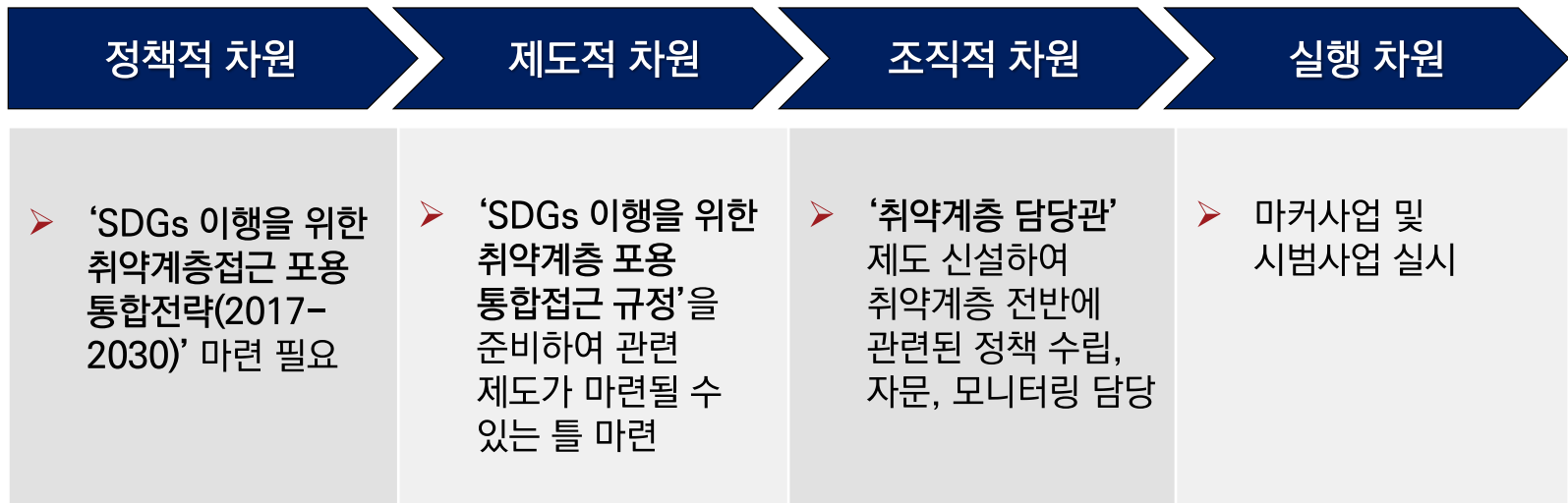
IV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전략

2. 취약계층에 대한 이슈별(인권, 젠더, 장애) 접근

젠더, 장애, 아동을 포괄하는 전략을 마련하여 이행의 기반을 다질 필요

SDGs 이행을 위한 취약계층 포용 통합접근 마련



IV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전략 2. 취약계층에 대한 이슈별(인권, 젠더, 장애) 접근

사실상 이슈별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취약계층 대상의 설정’ (기본범주 / 확대범주)

- 기본범주: 여성, 아동, 장애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근거)
- 확대범주: 난민, 노인, 소수민족 등 관련 부서에서 선정한 그룹이 포함

- 기본적으로는 사업명에 취약계층의 기본범주와 확대범주의 대상이 포함된 것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선정하나,
- 사업명에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 담당자가 취약계층 사업으로 ‘코드’를 표시할 수 있음.
 - 현재 젠더와 인권 마커 따로 체크하는 방식을 통합 코드로 변경하여 업무 효율 높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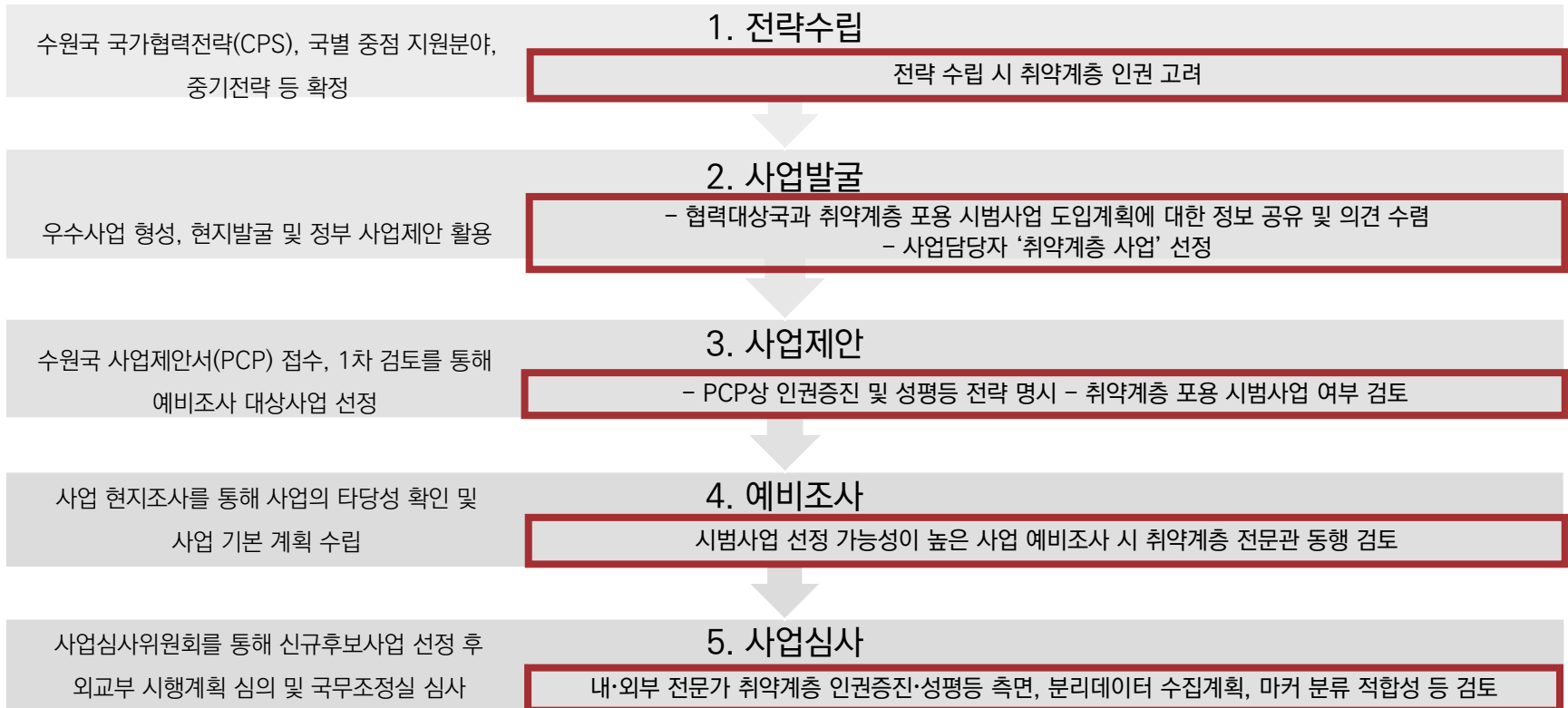
사업분류	분류 코드	내용
취약계층 대상 사업	a	여성
	b	아동
	c	장애인
	d	기타 (난민, 노인, 소수민족 등)
	e	해당 없음
젠더/인권 마커사업	0	(젠더) 성평등 목표사업 아님
		(인권) 각 취약계층의 인권증진 목표사업이 아님
	1	(젠더) 간접사업 : 성 주류화 사업
		(인권) 간접사업 : 각 취약계층의 인권 주류화 사업
2	(젠더) 직접사업 : 성 특정적 사업	
	(인권) 직접사업 : 인권 특정적 사업	
취약계층 포용	0	시범사업 아님
시범사업	1	시범사업임

IV KOICA의 인권기반 포용적 접근 전략

3.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 체계 제안

사업 시행 절차별 접근

KOICA 사업추진 프로세스상 개선사항 제시(안)



IV KOICA의 인권기반 포용적 접근 전략

3.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 체계 제안

사업 시행 절차별 접근

KOICA 사업추진 프로세스상 개선사항 제시(안)

6. 예산심의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심의

사전에 '취약계층 포용 시범사업'에 대한 관련부처 이해증진 필요

7. 기획조사 및 RD체결

사업 세부계획 수립

- 해당사업에 예산, 인력, 전문성 담보
- 인권PANEL 원칙을 사업프로세스에 반영
- 분리데이터 수집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8. 집행계획 수립

입찰공고, 입찰제안서 제출, 기술평가, 가격평가, 계약체결 및 본 사업 실시

단계별 인권증진 및 성평등의 목표와 필요성, 접근방법, 고려 계획 기술하도록 안내

9. 사업 시행자 선정 및 사업 수행

사업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확인 및 사업 기본 수립

입찰공고에 인권증진 및 성평등 목표와 필요성, 추진방안 기재한 사업자 선정

10.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 모니터링, 중간 점검 및 종료 평가

모니터링 시 가능한 범위 분리데이터 수집, 평가 시 취약계층 포용 현황 점검, HRBA 평가매트릭스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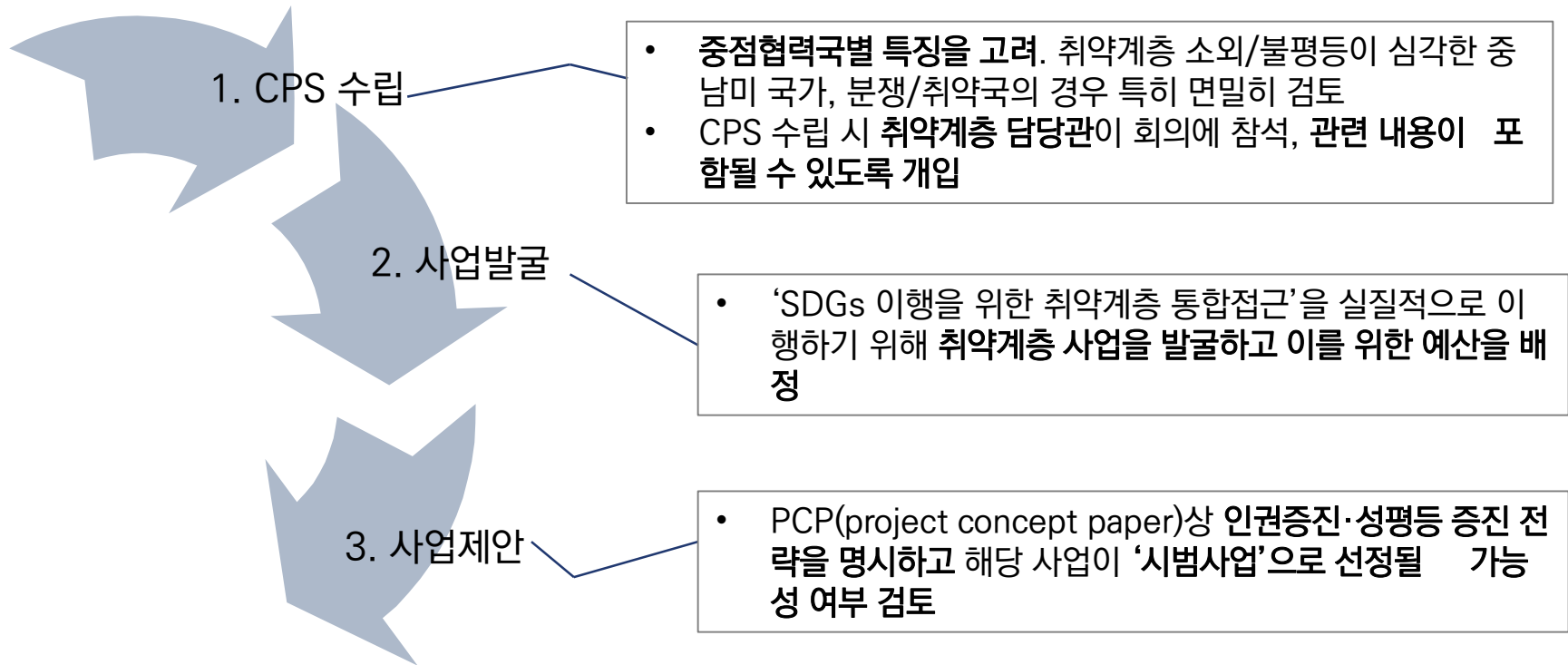
IV

KOICA의 인권기반 포용적 접근 전략

3.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 체계 제안

사업 시행 절차별 접근

취약계층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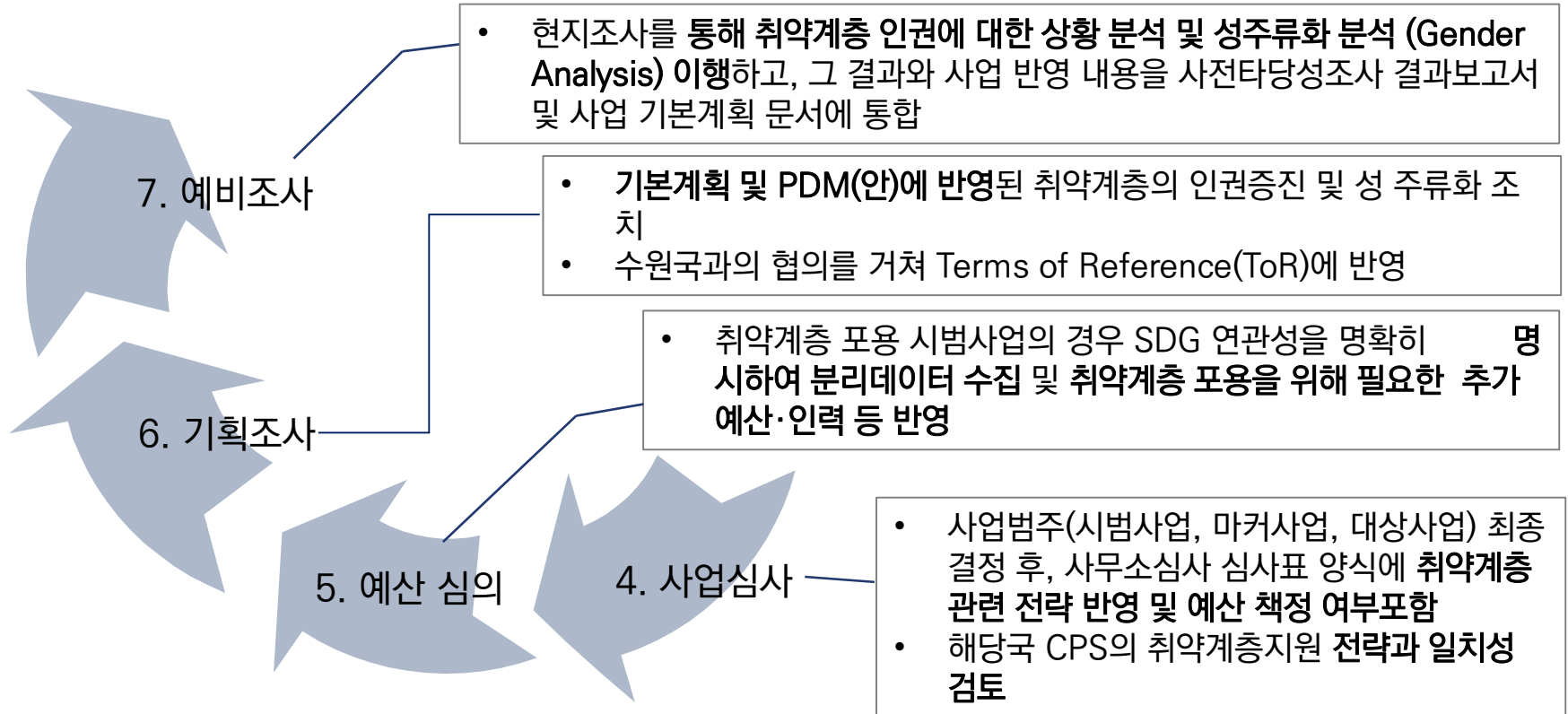


IV KOICA의 인권기반 포용적 접근 전략

3.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 체계 제안

사업 시행 절차별 접근

취약계층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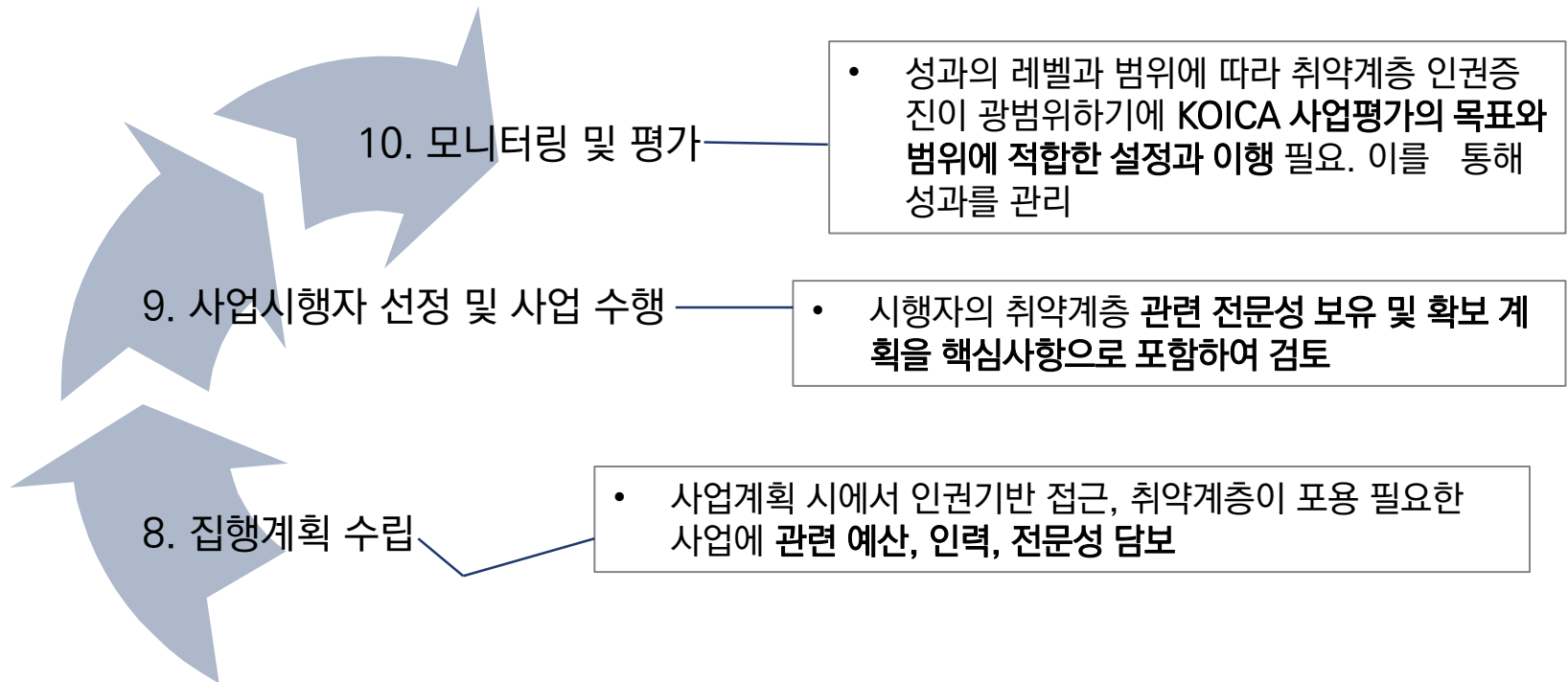


IV KOICA의 인권기반 포용적 접근 전략

3. KOICA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 체계 제안

사업 시행 절차별 접근

취약계층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I 서론

II 주요 양자 원조기관의 인권기반접근 추진현황

III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의 국내적 논의 및 지원전략

IV KOICA의 인권기반 포용적 접근 전략

V 결론

V 결론

- ✓ SDGs와 연계하여 정책적·제도적·조직적·실행의 다면적 차원에서 취약계층 접근방법을 제언하고,
 - ✓ 사업시행 절차별 접근 하에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핵심 지표 및 가이드라인

- 마커선정 기준
- 사업시행 절차별 취약계층 통합접근
- 인권기반접근 적용 시 역할분석 가이드라인
- 권리보유자와 의무부담자의 역량분석 체크리스트
- 평가 단계별 인권 도입점
- 평가 매트릭스 5대기준 - 인권원칙 연계모델

V 결론: 전략, 제도, 조직 차원에서의 향후 추진 과제

구분	현황	개선안	주체	우선순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차원/KOICA 차원 SDG 이행에 대한 방향성 명시: 구체성, 이행방안 부재 젠더/아동/인권 등 기존 관련전략의 분절화: 연계성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SDG이행위한 취약계층 포용 통합전략(2017-2030)’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젠더/아동/인권 전략 통합 및 연계 SDG 목표별 이행방안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ICA 전략 수립 (정책실/전문관)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부, 국조실 차원에서 추진하고있는 SDG 이행전략과 연계 	중장기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젠더, 아동, 인권 전략 수립 이후 원활한 이행 미흡 SDG 이행 관련 규정, 인센티브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SDG 이행위한 취약계층 포용 통합접근 규정’ 부서별 관련 이행과제 선정: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ICA 경영혁신실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ICA 사업실/지역실 	중기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차원 이해도/인지도, 전문성 미흡 교육 등 지원메커니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지 담당관 직제 → ‘취약계층 담당관’ 직제로 재구성 취약계층별 별도 전문관 고용/배치: 필요시 현지사무소 파견 취약계층 자문위원회 구성: 내외부 전문가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훈련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개발실 외 사업실/지역실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ODA교육원 	중기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마커제도-사업시행과 연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커 연계 및 통합 시범사업 선정: 분야별/지역별 대표사업(마커2 사업중) 1~2건 선정, 관리, 이행 후 향후 SDG 이행성과로 국조실 및 UN 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개발실, 관련 전문관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사무소 경영진 외교부/국조실 	중장기

V 결론: 사업 추진 단계별 개선방안

단계	벤치마킹	개선안	주체
전략수립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층의 인권”전략 (White Paper 1997, Target Strategy Paper 2000) DFID “참여, 포용, 의무의 실현” 원칙 국별프로그램 시 인권기반접근방식 명시 “전략적 접근 및 포용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적인 인권주류화 전략문서 필요 국가협력전략, 국별이행계획 수립 시 국가의 특징에 따른 상황분석, 취약계층 인권 고려 :특히 중남미 지역, 분쟁/취약국 	(KO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섹터실 지역실 현지사무소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의 책임” 스웨덴의 글로벌 개발을 위한 정책 (2003)“ 제 분야/주제 사업에서 고려, 반영할 수 있는 지침 제공 (green tool box, gender tool box, peace and conflict tool 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부 기재부 국조실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권 전략을 수립 “독일 개발정책에서의 인권전략 (2011)” GIZ, KfW 등 모든 시행기관은 인권 젠더 기반 가이드라인 수립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 전략 (DRG)” 수립 		

⋮

감사합니다.
